



주간 통일정세

2012-50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1일부터 김정일 1주기 애도기간 설정(12/3, 연합뉴스)**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1주기(17일)를 앞두고 이달 초부터 애도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정부 소식통은 3일 "북한이 이달 1일부터 김 위원장에 대한 애도기간을 설정하고 '애도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밝힘.

- **北, 김정은 '타임 올해의 인물' 후보 선정 보도(12/4, 통일의 메아리)**
 - 북한의 새 대남방송인 '통일의 메아리' 방송이 4일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오른 내용을 개국 방송의 첫 소식으로 보도해 관심을 샀음.
 - 이날 대남·대북방송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민간단체인 동북아방송연구회에 따르면 '통일의 메아리'는 지난 1일 오전 7시 내보낸 첫 방송에서 남한 언론을 인용, 김 제1위원장의 '올해의 인물' 선정 내용을 첫 소식으로 전함.

- **北 "간부들 당정책 의문시 경향..배은망덕"(12/6, 연합뉴스)**
 -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최근 주요 간부들의 보신주의를 강하게 질책하며 각성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이 문건은 "문제는 아직도 적지 않은 일꾼들 속에서 '무엇이 걸렸소 무엇이 부족하오' 하면서 심한 보신주의, 요령주의에 빠져 말로만 당 정책 관철에 대해 웨치고(외치고) 진짜로 한 몸 내대지(던지지) 않고 있는데 있다"고 지적함.
 - 문건은 이어 "문제는 당 정책을 대하는 우리 일꾼들의 사상정신 상태에 있다. 최근 일꾼들 속에서는 당 정책에 대해 의문시하고 그 집행을 걸써(허술하게) 대하는 것과 같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유해로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이것은 당과 수령의 명령, 지시에 대한 흥정이고 전면도전이며 사상적으로 변질되고 도덕도 의리도 없는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질타함.
 - 문건은 "일부 일꾼들 속에서 원칙도 없고 신념도 없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 어느 나라 식이요, 무슨 식이요 하면서 남의 것을 덮어놓고 미화하고 무턱대고 받아들여려고 하고 있다.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사대주의와 자기 것에 대한 허무감에 있다"고 밝힘.



- **北 "올해는 새로운 주체 100년 대진군 첫해"(1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추진된 각종 사업을 결산하며 지난 1년을 "새 시대를 개척한 역사의 기적" "새로운 주체 100년 대진군의 첫해"라고 강조함.
 - 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고 땅을 치며 쓰러졌던 천만군민이 김정은 동지의 손길에 이끌려 억척같이 일떠서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장엄한 진군을 개시했다"며 "위대한 유훈을 받들어 강성조선의 새 시대를 개척하는 역사의 기적을 창조했다"고 주장함.
 - 또, 통신은 구체적인 성과로 지난 4월 '태양절' 경축행사 등 각종 기념행사와 일꾼대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희천발전소 준공, 평양시내 공원건설, 모란봉 악단 공연 등을 꼽았음.

- **北, 신임 쿠웨이트 대사에 서창식 임명(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신임 쿠웨이트 대사로 서창식 전 외무성 국제기구국 국장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밝힘.
 - 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에 의하면 쿠웨이트 주재 조선(북한) 특명전권대사로 서창식이 임명됐다"고 전함.
 - 서창식은 오랫동안 국제기구 관련 분야의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1996년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으로 시작해 국제기구국 국장에 오른 인물임.

■ 김정은동향

- 12/5, 김정은 黨 제1비서, 12.5 김기남(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굴진공)과 리옥심(특류영예군인)의 결혼에 '감사와 결혼상' 전달(12.5, 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내각총리), 양각도체육촌 및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현지 요해(12.4, 중통 · 중방)
- 강원도 內 세포등판(산등성이의 평평하게 넓은 곳)을 대규모 축산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군민연환궐기모임, 12.4 세포 · 평강 · 이천군에서 촉촉 진행(12.4, 중통)
 - 광범기(黨비서), 리철만(내각 부총리), 백계룡(강원도당책) 등 참가
- 평양인건사공장 준공식, 12.5 최영림 · 문경덕 등 참가하 진행(12.5, 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12.7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등 현지요해(12.7, 중통)
- 김정일의 함경남도 현지도도('11.12) 기념보고회, 12.9 태종수(咸南道黨 책임비서) 등 참가하 진행(12.9, 중방)



나. 군사

● 北, 美푸에블로호 평양 보통강변 전시 계획(종합)(12/3, 연합뉴스)

- 북한이 내부적으로 '대미 항전'의 전리품으로 선전해온 미국 푸에블로호가 평양 대동강변에서 보통강변으로 옮겨 전시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함.
- 연합뉴스가 3일 북한 조선중앙TV를 분석한 결과 중앙TV는 지난달 30일 '새로 일떠서는(건설되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라는 제목의 영상물에서 "적무장 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보통강변(보통강변)에 진열되게 됩니다"는 한 군관의 말을 소개함.
- 북한은 지난 9월부터 보통강변 근처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현대적으로 고치는 공사를 본격 진행하면서 푸에블로호를 전시할 공간도 마련한 것으로 보임.

● 北, 4월 로켓 실패원인 1주일 만에 찾아(12/5, 조선신보)

- 북한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5일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실패한 것과 관련, "(발사 실패) 1주일 후 그것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원인에 대해 해명을 끝냈다"고 밝힘.
- 또 10~22일로 예정된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의 배경에 대해 "2012년 마지막 달의 위성발사 계획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언 실행의 산 모범"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년 두 번째의 인공위성 발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조선의 국가발전계획이 자체의 시간표에 따라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신문은 이어 "조선의 위성은 기념일을 장식하기 위해 쏘아올리는 상징으로서의 '축포'가 아니다. 국가건설의 견지에서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1주기에 맞춘 '축포'라는 외부 분석을 일축함.
- 또 "'광명성' 계획은 따로 있다. 2012년 설정된 실용위성의 궤도진입은 일시적 시련을 겪었던 조선이 연대와 연대를 뛰어넘는 비약을 이룩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다계단으로 변이 나게 하는 신호탄"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국방을 제일국사로 간주하는 나라가 군사기밀로 다루어야 할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린다면서 일부러 위성으로 가장한 발사체를 만들어 그것을 세계의 면전에서 보란 듯이 쏘아올려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군력강화가 목적이라면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된다"며 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국제사회의 주장을 반박함.
- 신문은 특히 "유훈 관철을 다짐한 영도자(김정은)의 의지는 (4월 로켓 실패 원인이 해명된 뒤) 최단 기간에 구현됐다"면서 "(김일성 주석 생일) '100돌'에 드리는 선물은 해를 넘기지 않고 준비됐다"고 밝혀 올해 로켓 발사 성공이 김정일 위원장이 남긴 뜻을 시사함.



- **北, 은하3호보다 더 큰 로켓도 개발할 것(12/7, 조선신보)**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7일 북한이 앞으로 더 큰 대형 로켓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보도함.
 - 신문은 이날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의 필수적 공정'이라는 글에서 "광명성 3호 발사가 성공해야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며 "다음 단계는 정지 위성의 개발이다. 은하 3호보다 더 큰 대형 운반 로켓의 개발에도 착수한다"고 설명함.
 - 또한, 신문은 "조선에서 올해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다"며 "이 계획의 첫 단계 사업이 첫 실용위성 광명성 3호 발사"라고 강조하면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신설된 서해위성발사장은 최대 400t의 운반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게 설계됐다"며 은하 3호(91t)보다 큰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을 시사함.
- **北로켓 기술적 문제인듯..어제부터 이상징후(종합)(12/9, 연합뉴스)**
 -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시기 조정 검토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뤄지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이 문제에 정통한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시기 조정 검토 발표를 한 이유와 관련, "기술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어제(8일) 낮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전했으며, 이와 관련,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 주변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짐.
 - 정부의 한 관계자는 "동창리 주변에서 일련의 (준비) 활동은 모두 중단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고치려고 하는 활동이 부산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함.

■ 기타 (군사)

- [우주공간기술위 대변인, 중통기자 질의 대답(12.8)] '광명성-3호 2호기 발사를 위한 준비사업을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 중인 과정에 일련의 사정이 제기되어 발사시기를 조절하는 문제를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12.9,중통·평방)

다. 사회·문화

- **北 "다언어 번역 컴퓨터프로그램 개발"(12/3,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3일 '조선어(한글)와 3개 이상 외국어의 번역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이날 우리민족끼리가 밝힘.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조선천선연합회 연구집단이 최근 조선어 중심의 다언어 번역체계를 개발했다며 "이 번역 체계는 조선어와 로어(러시아어), 중어, 영어, 일어 사이의 임의의 쌍방



향 번역을 컴퓨터(컴퓨터)에 의해 진행되는 조선어 중심의 첫 다언어번역프로그램"이라고 전함.

- 웹사이트는 이 번역프로그램의 명칭은 '별'이며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열린 제12차 전국 발명 및 새 기술 전람회에서 1등상을 받았다고 소개함.

● **북한 과학기술자·무역일꾼 중국어 학습 열기 후끈(12/5, 신화통신)**

- 북한과 중국 간 경제 협력이 가속하는 가운데 최근 북한에서 과학기술자와 무역 종사자를 중심으로 중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5일 보도함.
- 통신은 평양발 기사를 통해 평양 인민대학습당이 운영 중인 직장인 대상 무료 외국어 교육 과정을 소개하면서 현재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독일어 등을 제치고 중국어 강습반의 규모가 제일 크며 가장 인기 있다고 전함.

● **北 "은 사회에 혁명적 법질서 확립해야"(1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5일 전국법무일꾼대회를 열고 "은 사회에 혁명적 법질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함.
- 통신은 이날 "전국법무일꾼대회가 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는데, 법무일꾼은 검찰소, 재판소, 인민보안부 등 각종 기관에서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를 뜻하며 북한에서 전국 단위의 법무일꾼 대회가 열린 것은 2007년 2월28일 이후 5년 9개월여 만임.
- 이번 대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법무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은 사회에 혁명적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며 강성국가 건설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해 나갈 결의를 표명했다"고 밝힘.

● **北 식량배급량 10월부터 회복세(12/6,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식량배급량이 지난 10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보도함.
- 방송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자료를 인용해 올해 1~5월 1인당 하루 평균 396g을 유지하던 북한의 식량 배급량이 6월 380g, 7월 345g, 8·9월 310g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10월엔 380g으로 늘어난데 이어 11월에는 올 상반기 수준인 390g으로 회복했다고 전했으며, 북한의 지난달 배급량은 지난해 같은 시기 365g보다도 6.8%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 공안기관들, '불순분자 소탕 캠페인' 나서(12/6, 연합뉴스)**

- 북한의 공안·사법당국들이 최근 내부 소요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불순분자 소탕 캠페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함.
- 정부 고위당국자는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검찰과



경찰, 국가안전보위부 등 공안·사법기관들이 불순분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면서 "불순분자 검거 실적을 제출하라는 지시도 많이 내리고 있다"고 말함.

● **FAO, 북한 4분기 식량부족국가로 또 지정(12/7,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식량부족국가로 재지정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전함.
- FAO는 지난 6일 발표한 올해 4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곡물 수확량이 2년 연속 증가했지만,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으며, 북한이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경제난 지속과 농기계·비료의 부족을 꼽았음.

● **北대형상점, 판촉활동 위해 '캐시백' 제도 도입(12/8, 노스코리아 이코노미 워치)**

- 북한의 대형상점이 소비자의 구매욕을 높이려고 지출 금액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노스코리아 이코노미 워치가 8일 전함.
- 웹사이트가 최근 게재한 사진에는 평양의 대표적인 대형상점인 광복지구상업중심이 지난 4월 구매자들에게 사용금액의 5%를 상품권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행사를 갖는 모습이 담겼으며, 이 사진은 한 북한 방문자가 광복지구상업중심 내부에 걸린 대형 알림판을 찍은 것으로, 알림판에는 상품권 형식의 '우대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음.
- 우대표 발급 기간은 4월 15일부터 29일까지로 고객이 10만 원 이상 물건을 사면 5천 원 상당의 우대표를, 20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1만 원 상당의 우대표를 발급해준다는 내용이 명시됐고 20만 원 이상 구매자는 추가로 상점 내 식당에서 10%를 할인받을 수 있음.
- 알림판에는 또 "100만 원 이상 상품을 산 경우 식당에서 영구적인 우대 봉사(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카드 1장과 1만 원 우대표(를 발급해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으나, "우대표는 4월29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 캐시백 제도를 활용한 판촉활동이 상시로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기타 (대내 사회 · 문화)

- '세계 에이즈의 날(12.1)' 행사, 12.3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3, 중통)
 - 박명수(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 원장), '北, 에이즈 예방을 위해 여성들과의 정기적인상담과 검진강화 등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 강조(12.3, 중통)
- '국제 장애자의 날(12.3)' 즈음 2012년 장애자연환모임, 12.3 최창식(보건상) 등 참가下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12.3, 중통 · 중방)
- 北, 예술영화 '종군작곡가 김옥성(前 음악가동맹 부위원장)' 제1·2부 제작 선전(12.4, 중통)
- 수산과학분원 과학자들, 새로운 비환수형 수질관리방법 연구 도입(12.4, 중통)

2. 대외관계

가. 일반

- 北 "독도는 조선의 영토"...일본 명칭 검토 비난(1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일본 정부가 독도 봉우리의 지명을 일본 명칭으로 짓는 것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4일 "조선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못 할 침해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독도 봉우리 일본 작명은) 독도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일본 반동들의 책동이 보다 노골적인 단계에서 감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며 "지명을 붙일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영토주권을 소유한 민족에게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독도는 지난날 탐험가들에 의해 마음대로 이름 붙여지던 신대륙도 아니며 미개척지도 아니다"며 "먼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에 의해 개척되고 오늘도 우리 민족의 주권이 당당히 미치는 조선의 신성한 영토"라고 강조함.
- 쿠바, 9년 만에 유엔 통해 대북 지원(12/5, 자유아시아방송(RFA))
 - 쿠바 정부가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약 16만 달러(약 1억7천만 원)를 지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WFP의 대북사업인 '북한 취약계층을 위한 비상식량 지원'을 통해 굶주릴 위기에 놓인 북한의 240만여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며, 유엔을 통한 쿠바의 대북 지원은 2003년 WFP를 통해 약 43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것임.



- **北-中관광, 잦은 눈 탓에 예년보다 일찍 동계휴업(12/7, 중국신문사)**
 - 중국의 변경도시와 북한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북·중 관광 루트가 올해 예년보다 보름가량 앞당겨 겨울철 휴업에 들어갔다고 7일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 등이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5일 랴오닝성 단둥(丹東)에 있는 중국 여행사들에 "단둥에서 출발하는 신의주 1일 관광을 제외한 다른 관광코스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통지했음.

- **北, 15~20일 외국 관광객 접수 중단(12/8, NHK)**
 - 북한이 중국 여행사에 오는 15~20일 사이 외국인 관광객 접수 중단을 통보했다고 일본의 NHK방송이 8일 보도함.
 - 방송에 의하면 북한은 중국 동북부의 랴오닝성 여행사 등 북한 관광 취급 여행사들에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외국인 관광객 접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함.

■ 기타 (대외 일반)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日 정부의 '독도 봉우리 일본식 작명 검토' 관련 '독도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日 반동들의 책동이 보다 노골적인 단계에서 감행되고 있다'며 '재침책동이 실행단계에 이르렀다'고 비난(12.4, 중통/용납 못할 주권침해행위)
- 美 오바마 대통령의 再選 후 첫 베트남·태국 등 亞-太지역 순방과 중요성 강조(미국은 앞으로 태평양국가로 남아있을 것 등)는 "집권 기간에 亞-太지역에 군비경쟁과 새로운 냉전바람을 몰아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12.6, 중통·노동신문·평방/위험한 세계제패 기도)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 "南 인권결의안 제안국 참여는 정치도발"(1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최근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남한 정부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우리에 대한 용납 못 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6일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날 서기국 보도에서 "인민사랑의 정치가 가장 훌륭하게 구현되고 있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애당초 인권문제란 존재하지도 않으며 있을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힘.
 - 또 "인권문제는 오히려 미국 식민지이며 반인민 파쇼적 통치로 악명높은 남조선에 있다"며 "유신독재를 되살리려는 새누리당의 재집권 책동으로 앞날의 희망마저 기약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임.



● **박근혜, 남북선언 이행문제 의도적 회피(12/6, 조선신보)**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6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최근 TV토론회에서 밝힌 대북정책과 관련해 "기득권자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느라 애쓰는 허수아비"라고 비난함.
- 신문은 "토론에서 박 후보는 6·15 이후 남측 정부가 추진한 협력교류 사업을 북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퍼주기'로 단정하고 대북강경책의 추진을 정당화했다"며 "이명박 정권 논리를 되풀이했다"고 비난함.
- 또 지난 5일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통일정책을 발표하면서 남북 정상합의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대선 국면에서도 북남선언 이행문제를 피해가고 있다"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금강산관광 어떤 일 있어도 재개돼야"(12/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8일 "금강산관광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재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은 이날 발표한 진상공개장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남조선 인민들의 금강산 관광길이 다시 이어지게 하려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또, 진상공개장은 "이명박 역도와 새누리당이 집권 5년간 저지른 가장 큰 죄행의 하나는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킨 것"이라며 "괴뢰 보수패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자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금강산관광을 계속 가로막아 나서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고 있다"고 주장함.

■ 기타 (대남)

-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16호(12.6), 우리 정부의 '北인권결의안(유엔 총회 제3위원회) 공동제안국' 참여는 "우리(北)에 대한 적대분위기를 조성하여 反北 국제공조를 실현해보려는 흉책"이라고 비난(12.6, 중통·평방)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국제사회 전방위 北압박..정부, 저지노력 본격화(12/3, 연합뉴스)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제히 반대의 뜻을 밝힌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음.
- 정부는 3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연쇄 접촉을 갖고 북한 미사일 문제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함.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성김 주한미국 대사와 면담함. 또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와 각각 만날 예정임. 임 본부장은 4일에는 미국을 방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과도 만날 계획임. 이날 주변 4강 대사와의 면담은 김성환 외교부 장관이 전날 긴급 소집한 대책회의에서 결정됨. 북한 미사일 발사계획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알리는 동시에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한 차원임.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을 포기시키는 것이 정부의 당면 목표"라고 밝힘.
- 정부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 여론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됨. 중국, 러시아를 통해 북한에 이런 기류를 전달하려는 차원에서임.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계획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함. 중국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계획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내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의 뜻을 표명한 바 있음.
-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중대한 도발행위"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과는 한·미·일 3각 동맹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저지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됨.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동향을 정밀 파악하기 위해 정보자산도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등 대응 조치에 착수함.
- 앞서 북한은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에 미사일 발사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다만 이미 발사계획을 공표한 북한이 이를 철회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임. 이런 점에서 정부는 주변국 등 국제사회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의 대책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추가적인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번에



는 금융제재 등 새로운 내용이 안보리 결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北로켓 발사대 장착 시작 후 1주일이면 발사가능>(12/3, 연합뉴스)

- 북한이 오는 10~22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북측의 발사 준비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북한의 장거리 로켓인 은하3호는 1~3단 로켓이 합체된 이후 발사대에 세워지는 나로호와 달리 발사대에서 1~3단 로켓이 차례로 합체되기 때문에 발사대에 로켓이 장착되기 시작 이후 일주일 뒤에 발사 준비가 기술적으로 완료됨. 정부 소식통은 3일 "북한은 11월 중순 로켓 동체와 발사 관련 장비를 동창리 발사장으로 수송한 이후 발사장 내 조립건물에서 동체 조립 및 점검을 진행하면서 추진제(연료+산화제)를 보급하고 통신점검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동창리 소재 조립건물에선 1~3단 로켓 조립과 함께 각종 센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짐. 발사대 시스템과 추적·관제·계측 시스템을 비롯해 발사통제 장비의 성능 점검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짐. 조립 및 점검이 끝나면 1~3단 로켓과 관련 장비가 인근 발사대로 옮겨짐. 당국은 로켓 동체가 발사대로 이동하는 시점부터 실질적으로 로켓 발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나로호는 1~3단 로켓이 수평 조립 후 무진동차를 이용해 발사대로 옮겨졌지만 북한의 은하3호는 1~3단 로켓이 따로따로 발사대로 이동함. 군 관계자는 "1~3단 로켓이 차례로 발사대에 세워지는데 3~4일 정도 걸린다"며 "따라서 발사대에 로켓이 장착되기 시작 이후 일주일 뒤에 발사 준비가 끝난다"고 설명함. 발사대에 로켓을 장착하고 나서는 로켓을 발사대에 고정하는 지원구조물이 설치되고 전력 및 연료주입용 각종 케이블도 연결됨. 이후 산화제와 함께 연료가 주입되고 연료 주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최종 점검이 이뤄짐.
- 북한은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때는 12~16일 발사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서 13일 은하3호를 쏘아 올림. 이번에도 예고기간 중 둘째 날인 11일에 발사할 경우 4일부터는 발사대에 로켓을 장착하기 시작해야 함. 다만 이번 로켓 발사가 김정일 사망 1주기(12월17일)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1주기 2~3일 전인 14~15일에 발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음.
- 군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위치콘'을 평소 수준인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할 방침임. 탐지거리 1천km인 최신형 레이더 SPY-1을 장착한 이지스함 2척을 서해로 보내 장거리 로켓 탐지에도 돌입할 예정임. 미측도 최근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코브리볼(RC-135s)을 서해 상공에 투입할 것으로 보임. 탄도 미사일 궤적 추적 기능을 갖춘 정찰기인 코브리볼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때도 정찰 임무를 수행한 바 있음.



- **中, 조선 위성 발사와 관련해 각국들과 소통 이어갈 것(12/4, 인민일보)**
 -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3일 가진 연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조선의 위성 발사 발표와 관련해 각국들과 소통 및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홍 대변인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일은 각국의 공동이익이자 또한 각국들의 공동 책임이라며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힘써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국은 이번 일을 냉정하게 지켜보며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라며, 조선은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지지만 이 권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안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고 전했다.

- **日언론 "北, 17일 오전 7시~오전 8시 반 로켓 발사설"(12/6, 연합뉴스)**
 - 북한이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주기를 맞는 17일 오전에 로켓을 발사할 예정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니혼게이아이신문이 5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베이징발 기사에서 익명의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17일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30분 사이에 로켓 발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 17일은 김 위원장의 사망 1주기에 해당하는 날임. 북한은 김 위원장의 사망 시각을 오전 8시30분이라고 발표함. 신문은 북한이 이 시각에 맞춰서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김 위원장을 추도하고 국위를 과시할 의도인 것으로 보이지만 날씨에 따라서는 발사시각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北로켓 기술적 문제인 듯..어제 낮부터 이상 징후"(12/9, 연합뉴스)**
 -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시기 조정 검토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뤄지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문제에 정통한 정부의 한 소식통은 9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시기 조정 검토 발표를 한 이유와 관련, "기술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어제(8일) 낮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음'
 - 기술적인 문제가 원인이라면 북한 기술진들이 막판 발사준비 과정에서 '은하3호' 로켓에 간단하지 않은 문제를 발견해 시기조정 검토 발표까지 나왔다는 추론이 가능함. 이 같은 추정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당초 10일부터 22일까지로 설정한 발사 예고시기 내에 로켓을 발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됨.
 -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장에 3단 로켓을 장착한 뒤 발사 준비를 위한 로켓 동체 점검 및 통신 점검 등의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당초 이르면 8일부터 로켓에 연료를 주입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료주입 작업이 시작됐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



- 북한은 9일 새벽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의 언급을 통해 "일련의 사정이 제기되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시기를 조절하는 문제를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北, 로켓발사 시기조정 검토..정부, "발사 철회하라"(12/9, 연합뉴스)

- 북한이 9일 장거리 로켓의 발사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발사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며 대응 태세를 유지함.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은 "일련의 사정이 제기되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시기를 조절하는 문제를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새벽 보도함. 북한은 발사시기를 조절하도록 한 '일련의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북한의 발사시기 조정 검토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이 문제에 정통한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어제(8일) 낮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전함. 다른 관계자는 "동창리 주변에서 일련의 (준비) 활동은 모두 중단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고치려고 하는 활동이 부산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함.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이 당초 10일부터 22일까지로 설정한 발사 예고시기 내에 로켓을 발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됨. 그러나 북한이 중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발사시기 조절 검토에 나섰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음.
-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함. 정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함. 정부는 지난 1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감행계획이 발표된 직후 논평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발사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 바 있음.
-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사계획을 취소 또는 연기하기 전까지는 로켓 발사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를 유지키로 함.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위치콘'도 상황 조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힘. 군은 이날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해 구성된 통합위기관리 태스크포스(TF)를 초기대응반으로 전환하고 소장급이 주재하는 기능별 점검회의를 가짐.
- 미국과 일본 역시 북한의 발사 시기 조절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군함을 배치하거나 총리실에 대책실을 설치하는 등 기존 계획대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음.



나. 미·북 관계

- "北, 미사일 발사계획 '뉴욕채널' 통해 美에 통보"(12/3, 연합뉴스)
 - 북한은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사실을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
 - 현지 고위 외교 소식통은 2일(현지시간) "북한이 미사일 발사계획을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면서 "통보 시점은 공식 발표 직전 또는 발표와 거의 동시"라고 말함. '뉴욕채널'은 클리퍼드 하트 미국 6자회담 특사와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 차석대사를 중심으로 가동되는 비공식 외교 경로를 말함.
 - 이 소식통은 "북한의 통보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라 발사계획을 간단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임.

다. 중·북 관계

- 中"조선, 평화적 우주이용 권리 있어...각국 냉정하길"(12/3, 인민일보)
 -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2일 조선의 위성 발사 계획과 관련하여 조선 측은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각국은 냉정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함.
 - 조선 측이 곧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친 대변인은 "중국은 조선 측의 위성 발사 발표에 관심을 기울이고 아울러 각국들의 반응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조선은 평화적으로 우주를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안 등의 규제에 따라야 하는 문제다. 관련국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에 더욱 앞장서고 각국은 냉정한 자세를 취해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되는 일이 없길 희망한다."고 답변함.
 - 조선중앙통신사 측은 1일, 12월 10일에서 22일 사이에 조선 자체 기술 및 노력으로 제작한 '광명성 3호' 2기 실용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보도함.
- 중국 "북한 우주이용권, 안보리 결의 제한 받아"(12/3,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3일 "조선(북한)은 평화적으로 우주를 이용할 권리가 있지만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관 결의 등의 제한을 받는다"고 밝힘. 홍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물음에 "우리는 조선의 위성 발사 계획 발표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이 같이 답함.
 - 홍 대변인의 언급은 전날 수석 대변인인 친강(秦剛)이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임. 그러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느냐는 구체적 물음에 답을 한 것이어서 중국 정부가 북한의 위성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



것으로 해석됨.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아울러 홍 대변인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것은 관련국 모두의 이익이자 책임이라고 규정하면서 관련국들이 번갈아가면서 갈등을 심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함. 한편 홍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공식 발표 전 위성 발사 계획을 미리 들었느냐는 물음에 "우리는 조선의 위성 발사 계획 발표에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하면서 답변을 피했음.

● 中, 朝위성발사 관련 朝측과 의견교환 "신중하길"(12/5, 인민일보)

- 4일 열린 연례브리핑에서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조선 위성 발사와 관련해 "중국은 조선 측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었고, 조선은 주권국가로 평화적으로 우주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지만 한반도의 정세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안 등을 고려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는 중국의 입장을 밝힘. 아울러 홍 대변인은 "중국은 6자 회담 당사국들과 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냉정하게 처리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피하길 희망한다"고 전함. 홍 대변인은 또한 "중국은 각국들과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지속하여 현 사태의 원만히 처리와 한반도 및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함.
- 일부 국가들이 조선에 대한 제재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홍 대변인은 "현 상황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무엇보다 주안점을 두고 각국은 냉정하게 지켜보며 사태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조선중앙통신은 12월 10일에서 22일 사이에 조선 자체 기술 및 힘으로 만든 '광명성 3호' 2기 실용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보도함. 이에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6자 회담 관련국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음. 조선은 지난 4월에 '광명성 3호' 위성을 발사한 바 있음.

● 중국, 北로켓발사 대비 선양군구 1급 경계태세 (12/7, 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 경계와 정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중국의 보도전문 채널인 제1시빈(第一視頻, VI.CN)이 7일 보도함.
- 이 보도에 의하면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가 중국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북동지역의 방위와 경계를 책임지는 선양(瀋陽)군구는 물론 미사일 감시 및 정찰을 담당하는 부서와 미사일 방어를 맡은 부서들이 1급 경계 태세에 들어감.
- 중국은 또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를 새 지도부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면서 로켓발사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자체 경계 및 정찰을 강화하고 있음. 중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극동 지역의 경계 등을 강화하며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제1시빈은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북한 로켓 발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외교부 공식 브리핑 등을 통해 "신중하게 행동하라"며 압박하는 등 북한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유달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일본의 핵군축 결의, 북한만 반대...유엔에서 채택(12/4, 요미우리신문)**
 - 국제연합총회는 3일, 일본이 제출한 핵군축 결의안을 찬성 174, 반대 1, 기권 13으로 채택함. 같은 결의의 채택은 19년 연속으로 이번 찬성표는 과거 최다임. 결의는 핵확산 금지 조약(NPT) 준수나 북한의 핵개발 즉시 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북한만이 반대함. 중국이나 NPT비가맹의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이 기권함.
- **日, 北로켓 대비 도쿄 등 7곳에 패트리엇 배치(종합)(12/6, 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비해 수도권과 오키나와(沖縄) 주변 등 7곳에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PAC3)를 배치함.
 -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5일까지 도쿄 신주쿠의 방위성, 지바(千葉)현에 있는 육상자위대 나라시노(習志野) 훈련장, 사이타마(埼玉)현의 아사카(朝霞) 훈련장 등 수도권 3곳에 패트리엇을 배치함. 이는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나 잔해가 수도권에 떨어질 경우 요격하기 위한 것임. 수도권은 북한이 예고한 로켓의 비행 궤도와는 관계가 없지만, 방위성은 "수도의 기능을 방위하는 중요성이 있다"고 밝힘.
 - 일본은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당시에 수도권 3곳에 패트리엇을 배치함. 방위성은 수도권 외에 북한이 발사할 로켓의 궤도권에 있는 오키나와 본토의 항공자위대 니하(那覇) 기지와 치넨분톤(知念分屯) 기지, 이시가키(石垣)섬, 미야코(宮古)섬에도 패트리엇을 배치함.
 - 방위성은 로켓 발사 정보 탐지와 필요할 경우 요격을 위해 해상 배치형 미사일인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도 한국의 동해 쪽에 1척, 오키나와 주변 동중국해에 2척을 배치할 계획임. 이지스함 3척은 이날 나가사키(長崎)현에 있는 해상자위대 사세보(佐世保) 기지에서 동해와 동중국해로 출발했음.
- **이지스 함 3척, 사세보 출항...북 미사일에 경계(12/6, 요미우리신문)**
 - 북한에 의한 사실상의 탄도 미사일 발사 예고를 받아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 호위함 3척이 6일 아침, 해상자위대 사세보 기지(나가사키현)를 출항했음.
 - 방위성은 "탄도 미사일의 낙하는 통상 일어날 수 없다"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행 루트 부근의 오키나와 근해와 동해 경계에서 감시할 예정임. 동기지를 출항한 것은 3척임. 이 함정들이 탑재하고 있는 요격 미사일 'SM3'는, 탄도 미사일을 대기권외에서 격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일본으로 낙하해 오는 케이스에 한해서 요격을 실시함.



● **日, 北로켓 긴급대책본부 설치...대응태세 완료(12/9,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완료함. 일본 외무성은 9일 북한이 10~22일 사이 예고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비한 긴급대책본부를 설치함.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을 책임자로 하는 이 대책본부는 한국, 미국과의 공조와 연락을 전담하고 대책을 조율함.
-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북한이 발사할 로켓 본체나 잔해가 자국 영토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요격을 할 수 있도록 자위대에 '파괴조치명령'을 내렸음. 이어 8일까지 로켓 발사 정보를 탐지하고 필요할 경우 요격하기 위한 이지스함과 패트리엇(PAC3) 배치도 완료함. 일본은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인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 3척을 한국의 동해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궤도권인 동중국해에 배치함. 또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일본 영토에 떨어질 경우 요격하기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도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3곳과 오키나와 본토 및 주변 섬 3곳 등 모두 7곳에 설치함.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유해 연료가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비해 오키나와에 육상자위대 화학방호부대도 배치함. 북한의 로켓 발사 정보 보고 체계를 총리실로 일원화하고, 발사 정보가 들어올 경우 곧바로 전국 즉시경보시스템을 이용해 공포하기로 함.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 기간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총선 유세를 자제하고 총리 관저에서 대기하기로 했으며,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과 겐바 외무상도 비상근무를 하기로 함.
- 한편, 일본 정부와 언론은 북한이 로켓의 발사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와 관련 발사 연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음. 노다 총리는 이날 아침 한 민방에 출연해 북한의 로켓 발사 연기 가능성과 관련 "정부로서는 발사 연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만전의 태세를 갖추겠다"고 경계 태세 지속을 강조함. 일각에서는 날씨나 기술적 문제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관측했고, 북한이 한국과 미국, 일본의 반발과 중국의 자제 촉구를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음.

마. 러·북 관계

● **러시아, "北 로켓 발사 계획 재검토 간곡히 호소"(11/27, 연합뉴스)**

- 러시아도 3일(현지시간)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유감을 표명하고 발사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구함.
-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12월 10일~22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의 발표를 유감스럽게 받아들인다"며 "로켓 발사에 관한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북한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힘. 성명은 이어 "러시아는 그동안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로켓 발사를 확실히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무시하는 일이



- 허용될 수 없다는 점에 북한의 주의를 환기시켜 왔다"고 설명함.
- 외무부는 또 "러시아는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모든 회원국에 강제력을 갖는 안보리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평화적 우주개발 권리를 의심하지 않지만 그 실현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안보리 결의가 해제된 맥락에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함.
 - 성명은 "러시아는 6자회담 파트너들과 함께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러한 노력의 하나가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와 평화적 우주 개발 및 원자력 에너지 이용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국제적 협력에 북한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지난 1일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 발표 이후 미국, 일본, 중국 등과는 달리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오전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

바. 기 타

● **日총리 "北로켓 발사시 신속 공표"(12/3, 연합뉴스)**

- 지난번 북한의 로켓 발사 때 이를 즉각 공표해 비판을 받았던 일본 정부는 이번에는 이를 신속히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3일 밝힘.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일본 정부는 올해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때, 이를 40분 뒤에 발표해 비난을 받았음. 일본 정부는 당시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 발표가 늦었다고 해명한 바 있음.
- 노다 총리는 각료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함.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국민에게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함. 그는 "보통 (위성이) 우리 영토에 떨어지지 않는다"며 북한이 예고한 발사 기간에 국민이 일상 활동을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北 로켓 발사 대비 정찰자산 확대 운용(12/3, 연합뉴스)**

-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 동향을 정밀 감시하기 위해 정찰 자산을 확대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군의 한 소식통은 3일 "북한의 로켓 발사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한미 군 당국은 북한군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때까지 정찰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이 소식통은 "다만 한미연합사령부는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은 평시 수준인 3단계로 유지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은 1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장거리 로켓을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에서 남쪽으로 발사하겠다고 발표함. 한미 양국은 위성과 정찰기 등을 최대한 활용, 동창리 지역의 로켓 발사 움직임을 정밀 감시하고 있음.
- 군 관계자는 "로켓 동체는 동창리 소재 조립 건물로 이동해 조립 및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동체가) 발사대에 서 있지는 않은 상태"라며 "1~3단 로켓을 발사대에 세우고 원료를 주입하는 데는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함..
- 미측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 탄도 미사일 궤적 추적 기능을 갖춘 정찰기 코브라볼(RC-135s)을 오키나와 공군기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짐. 코브라볼은 북한의 과거 장거리 로켓 발사 때도 감시 역할을 수행한 바 있음.

● 임성남, 한미 北미사일 대응 협의 후 귀국(12/7,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한 외교 노력을 펼쳐나가는 동시에 발사를 강행할 경우에 대비한 절차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7일 밝힘.
-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대응책 논의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귀국한 임성남 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 관리들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폭넓고 깊이 있는 협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전함. 임 본부장은 4일부터 시작된 방미 기간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과 회동함.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안보리 결의안 위반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는 데에 (한미가)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우선 발사 저지를 위해 외교 노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함.
- 임 본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데 인식이 일치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말함. 임 본부장은 6자 회담 참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함. 그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은 외교적 설득 노력은 물론 안보리 차원의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가는데서도 중요한 만큼 두 나라와도 소통과 협조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함.

나. 한·중 관계

● '한중문화친선의 밤' 6일 열려(12/5, 연합뉴스)

- 한중문화협회(회장 이영일)는 6일 오후 6시30분 중구 을지로1가 프레스던트호텔에서 '한중문화친선의 밤'을 개최함.



- 협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고 한중수교 20주년을 돌아보고자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장신선 주한중국대사 등 중국 외교관을 비롯해 이한동 전 국무총리, 운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영일 회장은 5일 "올해 한중 양국은 정부와 민간 할 것 없이 다채로운 행사를 열어 20년 전 양국지도자들이 내린 역사적 결단으로서 한중수교를 돌아봤다"며 "새해에도 양국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힘. 한중문화협회는 올해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교류를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포럼을 열었고, 협회의 역사를 담은 '한중문화협회의 연구'를 출간했음.

● 김외교 "北 미사일발사시 제재방안 中과도 협의"(12/6, 연합뉴스)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뤄질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도 협의 중이라고 밝힘.
-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 "중국과도 제재 방안을 논의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협의하고 있다"고 답함. 다만 김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내용에 대해 협의는 했지만 합의한 것은 아니다"며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런 노력에도 발사를 한다면 북한이 실질적으로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제재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함.

다. 미·중 관계

● 中, 美국회 다오위다오 관련 수정안에 절대 반대해 (12/4, 인민일보)

- 3일 열린 외교부 연례브리핑에서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 국회 하원의 '2013회계연도 국방위임법' 수정안에서 언급한 다오위다오(釣魚島) 문제와 관련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전함.
-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미 국회 하원은 최근 '2013회계연도 국방위임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수정안에서 미국은 다오위다오 주권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일본의 행정 관할권은 인정하는 바 어떠한 3자국의 일방적인 행동으로도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전했다며, 이에 중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에 대해 질문함.
- 홍 대변인은 "다오위다오 및 부속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로 중국은 이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진다. '미일안보조약'은 냉전시대의 산물로 양자 간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되며 3자 측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더욱 안 된다. 미국 측은 여러 차례 중일 영토분쟁에서 양자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미국 측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탕으로 언행일치하여 자기모순적인 그릇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 아닌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써 주길 희망한다"라고 밝힘.
- 현지시간 11월 29일, 미국 하원 전체회의에서는 2013회계연도 '국방위 임법'에 보충 조항을 삽입하고 다오위다오는 '미일안보조약' 제5조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명확히 규정함. 아울러 보충 조항에서 다오위다오의 주권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관할권은 일본에 있다고 인정함.
 - '미일안보조약' 제5조에 근거해,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만약 미일 중 한 쪽이 무력적 공격을 받을 경우에 이 같은 위협에 양국은 함께 대처할 것이며, 이와 함께 관련 행동지침을 즉각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고 안보리에서 평화적 조치를 취할 경우 즉각 중지하기로 합의했음.

● 중국, 미국 '티베트 우려 표명' 비난 (12/7,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티베트인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를 표명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7일 "미국 모 관리의 성명은 달라이라마 집단을 규탄하는 대신 중국의 민족, 종교 정책을 공격한 것으로 이는 흑백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고 성토했. 홍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국무부의 마리아 오테로 인권 담당 차관이 티베트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성명을 낸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이는 티베트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난함. 홍 대변인은 이어 "티베트 문제는 민족, 종교, 인권 문제가 아닌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며 "중국은 누가 어떤 형식으로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덧붙임. 그는 아울러 티베트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과 13억 중국인의 민족 감정과 관련이 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티베트 문제를 이용,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함.
- 오테로 차관은 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티베트인의 항의 활동에 대해 그들의 종교·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더욱 억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난함. 2009년 2월 이후 중국의 지배에 항의하는 티베트인 분신 자살자 수는 모두 92명에 달했고, 특히 중국 최고 지도부가 교체된 18차 당 대회가 치러진 지난달에만 29명이 분신한 것으로 전해짐.

라. 미·일 관계

● "日 자민 아베 총재, 집권땀 바로 미국 방문"(12/8, 연합뉴스)

-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바로 미국을 방문해 동맹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함.
- 이 통신에 의하면 아베 총재는 오는 16일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할 경우 내년 1월 중순께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측에 이런 계획을 타진함. 일본 언론은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자민당이 중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아베 총재가 총리에 취임함.

- 아베 총재가 집권 후 조기 방미를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 정권에서 흔들린 미국과의 동맹을 재구축하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대응책과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것임. 아베 총재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의 대립이 격화한 것은 민주당 집권 기간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아베 총재가 미국을 방문할 경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자위대와 미군의 공조 절차와 방식을 규정한 '방위협력지침'의 개정 방향 등을 표명할 것으로 보임.

마. 중·일 관계

● 中, '센카쿠 충돌' 가정 해상훈련..10월 이후 두번째(12/3, 연합뉴스)

- 중국 해군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충돌 상황을 가정한 해상 훈련을 다시 실시함. 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만재배수량 8천급 구축함 항저우(杭州)함과 Ningbo(寧波)함, 만재배수량 4천급 호위함인 저우산(舟山)함과 마안산(馬鞍山)함이 지난 1일 서태평양 모 해상에서 구조 훈련을 실시함. 이들 함정은 모두 함포 뿐 아니라 함대함 유도탄을 탑재하고 있음.
- 이번 훈련은 중국의 해양감시선과 어정선 등 관공선이 '주권 수호 순찰'을 하다가 '타국 함정'과 충돌해 2명의 승조원이 바다에 빠진 상황을 가정하고 실시됨. 구조 요청을 받은 해군 함정은 즉각 사고 해역으로 이동, 탑재 헬리콥터를 띄워 바다에 빠진 승조원을 구출함. 신화통신은 '타국 함정'이 어느 나라 함정인지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음. 그러나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훈련 내용으로 볼 때 이는 센카쿠 열도 근해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에 대비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함.
- 중국은 10월에도 동중국해에서 센카쿠 충돌 사태에 대비해 해군 호위함과 의무선, 해감총대 소속 해양감시선, 어정국 산하 어정선 등 11척의 함정을 동원한 비슷한 훈련을 함. 중국이 이런 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센카쿠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 관공선과 충돌하는 등 적극적 방식으로 제지에 나설 경우 곧바로 해군을 투입하겠다는 '경고 신호'라는 풀이임.
- 차기 총리로 유력한 일본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재는 최근 센카쿠 해역에 퇴역 자위함을 배치해 중국의 영해 진입에 맞설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해 중국을 자극함.

● 일본 6자회담 수석대표 중국 방문 무산(12/7, 연합뉴스)

-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려던 일본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의 방중 계획이 중국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홍콩 언론이 7일 보도함.
- 홍콩 명보(明報)는 일본 교도통신을 인용,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



- 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최근 중국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고 전함. 스키야마 국장은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논란이 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과 관련된 협의를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신문은 중국 측으로부터 일정 조율 협조를 받지 못한 것이 방중 취소의 배경이라고 소개함.
-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저우용성(周永生) 교수는 "일본 측 수석대표의 중국 방문 무산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과 관련이 있다"면서 "영토 분쟁이 양국의 신뢰를 훼손하면서 국제문제 공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함. 저우 교수는 "일본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고려해 중국이 협력 논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임.

바. 중·러 관계

● 원자바오-푸틴 회담, 양국관계 강화 약속(12/7, 연합뉴스)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 강화를 약속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7일 보도함.
- 원 총리는 전날 러시아의 남부 도시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함. 그는 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최근 몇 년 새 중대한 계기를 맞고 있다"며 "양국이 서로 핵심 이익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확고하게 지원해왔고 손을 맞잡고 국제금융위기를 해결하면서 경제·무역 협력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함. 그러면서 "양국이 세계 평화와 발전과 연관된 지역 및 국제 이슈들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가자"고 주문함.
- 원 총리는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러시아가 세계 경제의 기동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러시아와 세계 모두에 이로운 일"이라고 덧붙임.
-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와 중국 간에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양국에 사회·경제적인 발전이 촉진되고 있다"고 화답함. 그는 "중국이 지난 몇 십 년 동안 이룬 눈부신 경제 성장과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제고 등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쁜 마음"이라고도 함. 아울러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로 중국이 순조롭게 차기 지도부를 출범시킨 것도 축하할 일이라고 덧붙임. 푸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3일 터키 이스탄불을 방문했다가 4일 소치로 돌아와 내각회의를 주최하고 5일엔 투르크메니스탄에 가서 독립국가연합(CIS, 옛 소련권 국가 모임) 정상회의에 참석하고서 6일 원 총리와 회담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함.

사. 기 타

● <한미일 北로켓발사 중단 '설득외교' 합의 의미는>(12/5,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비공식 약식회담'을 열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하고 나선 북한에 대한 '설득외교'에 주력하자는 공감대를 이끌어냄 이는 한국과 미국, 중



국, 일본 등 관련국들이 대부분 권력 교체기를 맞아 가급적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정세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됨.

- 세 나라는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은 분명히함.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강경 대책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크게 유리하지 않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임. 특히 '중국 변수'를 고려한 흔적이 역력함. 우선 중국을 통해 권력기반이 아직은 확고하지 않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설득을 시도하려면 가급적 북한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임.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경우에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조는 필수적임. 안보리 차원의 규탄 결의는 물론이고 대북 제재를 추가로 추진하려면 중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함.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 6자 수석회동 이후 "한·미 양국 간 외교적 노력도 강화돼야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이런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됨.
- 한미일 3국은 이에 따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까지와 발사 이후를 구분해 대응해나갈 방침임. 북한의 발사 이전까지 가급적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북한에 대한 설득외교를 경주하는 것은 발사 이후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발판도 될 수 있음. 미국은 '뉴욕채널'을 통해서도 오바마 2기를 맞아 새로운 북미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도 발사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짐. 한미 양국은 북한이 끝내 로켓 발사라는 도발을 강행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과거 2005년 북한에 가했던 이른바 'BDA(방코델타아시아) 금융제재' 방안을 포함해 불법물자 등의 해외반출을 막는 '해운규제', 이란에 대한 포괄적 제재법안과 같은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하지만 금융제재 등이 효과를 거두려면 이 또한 중국의 협조, 또는 동기가 필요함.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아무리 강한 금융·해운 제재라고 하더라도 '위안화 거래 계좌'나 국경무역 등을 통해 북한은 제재의 사각지대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세 나라는 이번 약식회동에서는 일단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지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한편 대북 제재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다"고 임 본부장은 밝힘. 이런 기조에서 임성남 본부장과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의 회동도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한 외교소식통은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서 임 본부장의 워싱턴 일정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아인혼 보좌관과의 만남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함.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강력한 북한 돈줄죄기를 추진할 가능성이 이미 언론에 보도되면서 '소기의 메시지'를 알린 상황에서 구태여 북한이나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한편, 이날 열린 '비공식 약식회담'은 생경한 회동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오래전에 확정된 외교일정이 아니었음. 임성남 본부장과 미국 6자 수석 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간 회동은 사전에 확정된 일정이었음. 당초 베이징(北京)에서 북일 회담을 하기로 했던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회담이 연기된 이후 전격적으로 워싱턴DC를 방문하면서 3자 회동이 성사됐다고 외교소식통이 전함.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